

▷▷▷ 2026년 2월 23일

KIWOOM 매크로 따라잡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RA 김정현 jiyun.yoo@kiwoom.com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제한적 실익과 정책 불확실성 확대

미국 대법원이 IEEPA 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었으나, 무역확장법 232 조 관세는 유지되어 국가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 조 대상 품목 비중이 높은 한국은 IEEPA 무효화에 따른 실질적 손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소비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관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 조를 통한 대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 기간이 150 일로 제한되어 있어 IEEPA 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실효관세율은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세 수입 감소와 환급 이슈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며,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함께 달러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환율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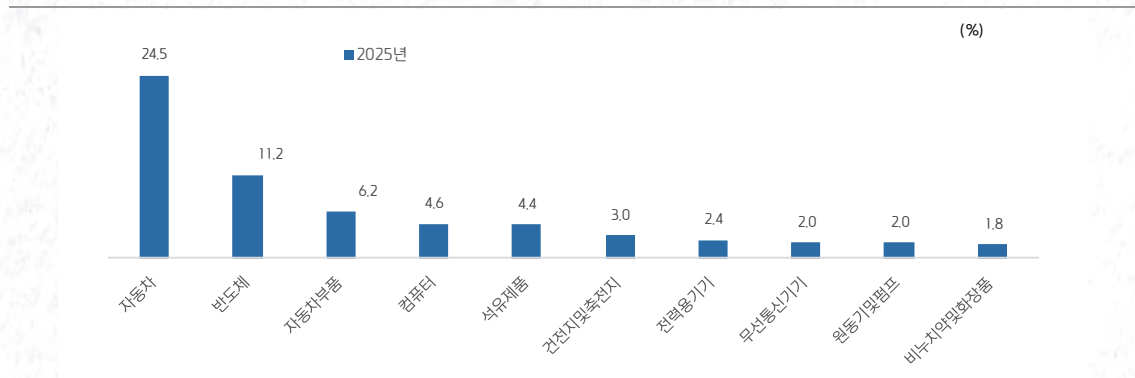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 대 3 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지난해 3월 '해방의 날'에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을 명목으로 한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관세, 그리고 기타 국가에 부과된 IEEPA 기반 관세는 모두 무효화된다.

이번 IEEPA 관세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영향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관세가 유지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반도체 등 232 조 대상 품목은 IEEPA 상호관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232 조 대상 품목의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에는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32 조 대상이 아닌 소비재 및 일부 중간재 수출은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이 IEEPA 무효화로 얻는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2025년 4월 이후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는 무역확장법 232 조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펜타닐 관세와 IEEPA 상호관세가 함께 무효화되면서 소비재 및 중간재 수출에서 관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 대미 수출 주요 품목별 비중(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IEEPA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 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 조는 1974년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22 조는 관세 부과 기간을 최대 150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IEEPA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2월 20일 서명된 해당 조치는 2월 24일 발표되었으며, 의회 승인이 없을 경우 150일 후인 7월 24일 자동 종료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의회 승인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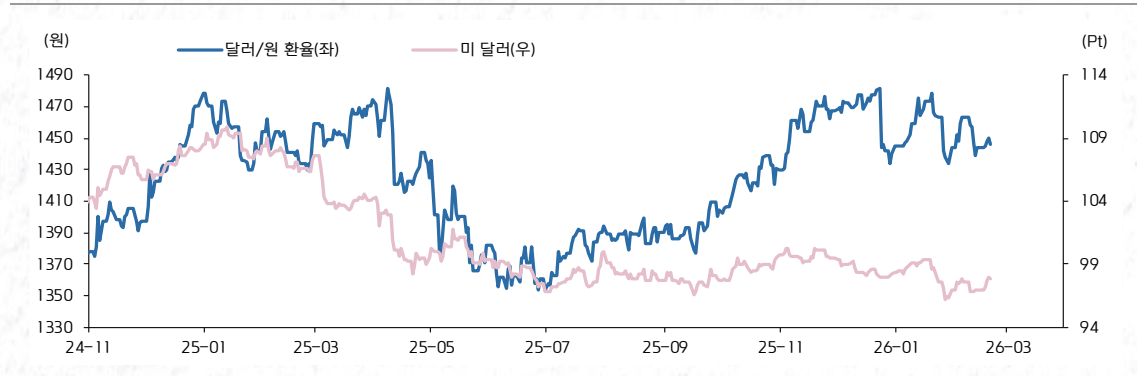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법 122 조(단기)와 무역확장법 232 조(중장기)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관세율이 낮아졌다가 이후 품목별로 재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관세율 상한과 적용 품목 제한을 고려할 때 IEEPA 관세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IEEPA 관세가 전체 관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122 조 관세로 일부 대체되더라도 실효관세율은 약 1.5~3%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IEEPA 판결에 따른 관세율의 일시적 하락 및 재조정은 재정과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IEEPA 관세 무효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그 폭은 대체 관세의 수준과 기업들의 가격 조정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요 세입원으로 부상한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관세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2026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0.5%p 증가한 6.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환급은 전면적인 일괄 지급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절차 장기화 또는 부분 환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세 수입 감소와 환급 이슈는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며, 이는 금리와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약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상반기 중 달러/원 환율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환율과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